

승가교육

교육체계 문제있다

조 계종의 현행 승가교육체계는 기초 교육(행자교육원), 기본교육(중앙승가대, 동국대, 강원, 기초선원), 전문교육(승가대학원, 학림, 울원, 어산학교), 재교육(분발사 주지연수, 중진지도자과정연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 체계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조계종은 기본교육 4년을 이수해야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행자교육을 마친 예비승인 사미(니)는 비구(니)가 되기 위해 중앙승가대, 동국대, 강원, 기초선원을 졸업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을 졸업하고 중앙승가대나 동국대로 진학하거나, 반대로 중앙승가대나 동국대를 졸업하고 강원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8년이라는 기간을 기본교육에 매달리는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 단적인 예가 중앙승가대이다. 중앙승

강원·동국대·승가대 특화로 상호 보완

행자교육 1년으로 연장, 교육 질 강화를

가대의 경우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97년 이후부터 2002년 신입생 모집에 이르기까지 매년 정원의 50~60% 밖에 채우지 못했다. 현대적 특성을 살린 전문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외면당하고 있고, 또 졸업하더라도 전통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다시 강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전통과 현대식 교육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교육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행자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교육장도 없는데다, 현행 6개월 기간으로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 게다가 교육원 통계를 보면 95년 이후 행자교육을 이수하고도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니)가 30%를 넘는다. 비구계를 받지 않아도 스님 노릇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요자가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교육. 현행 승가교육의 문제는 이 한마디로 함축될 수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 관계자들은 강원을 전통교육기관으로,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는 현대식 교육기관으로 각각 특성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한다. 즉, 강원은 수행자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는 복지 문화 등 불교와 사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기 특성화된 교육적 필요를 담당하면서 상호 위탁교육 등의 교류를 통해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자교육은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늘려 승려가 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인력활용도 높여야

2년 전 교육원이 강원인 학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33%가 현 교육체계가 부적당하다는 견해와 함께 교육내용도 다양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식주입 위주의 교육에

매몰돼 수행자이자 대중의 사표로서의 능력과 면모를 배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활용 문제도 심각하다. 울원의 예를 보면, 전국의 4개 울원에서 한 해 배출되는 인원은 20여명이지만 전문적 역량을 살린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각 교구본사에서 율학을 강의하

현재 불교계 NGO는 수십여 곳에 이른다. 이 중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나 분야에서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몇몇 NGO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팬 파워'를 발휘하고 있어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될 만하다.

불교계 NGO 중 모범적인 단체는 정토회, 정토회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 JTS, 좋은벗들, 정토수련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들 단체의 전문성은 정책위원이라 불리는 지도그룹과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의 유기적인 관계로 발휘된다.

국제평화·인권·난민지원을 하는 좋은벗들의 경우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 등 5명의 정책위원들이 한반도 통일정세 파악과 사업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준다. 한국 불교환경교육원의 경우 밀양대 이병인 교수 등 30여명의 정책위원들이 생명운

고 포살법회를 정례화하는 등 울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화·전산화 통한 인력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그림·김영민

조계종 승·재가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교육에 8년... 교육체계 '소모적'

조 계종의 현행 재가교육체계는 입교 교육(사찰), 기본교육(사찰, 연합교육기관), 전문교육(불교대학), 지도자교육(포교원), 재교육(포교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도교육 업무를 주관하는 조계종 포교원은 99년 신도법 개정 이후 2002년에야 교육체계를 갖추어 실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때문에 현 재가교육체계는 겉핥기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도기본교육

기초교리, 불교예절 등 불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는 신도기본교육은 지난해 473개 사찰에서 실시됐다. 조계종 재적사찰의 25% 수준이다.

교과과정 미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교재로 발간한 <불교입문>을 활용하고

기초교육 실효 적고 강사 확보 어려워

중단차원 어린이·청소년 교육방안 부재

있는 사찰(209곳)이, 사중에서 교재를 발간해 사용(83곳)하거나 임의적으로 교재를 채택한 사찰(137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의 교재를 활용하는 사찰들은 <불교입문>의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내용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본교육 이수

을 배출했다. 이영철 사무처장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공동체 초록마을에서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모델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몇몇 불교계 NGO들은 각 분야 전문가나 학자들이 단체의 두뇌 집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하지만 두뇌집단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추진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이런 결과물들은 다시 두뇌집단으로 피드백 된다.

정운기 불교아카데미 교육연구실장은 "두뇌집단의 결정이 상근 실무자들에게서 수정·보완되고 이것이 다시 두뇌집단으로 되돌아가는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단체의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교계 NGO

전문성·인력양성 시스템 갖춘 단체 극소수

전문가 집단 두뇌활용 운영 효율 높여야

동아카데미, 생태학교 등 20여 차례의 교육을 통해 쓰레기제로운동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정책위원회와 정토회원들이 각종 토론을 통해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을 결의하면 상근실무자들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전문성을 키워나간다. 한국JTS의 인도불교 지원 사업이나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 사업이 좋은 예다. 여기에 수십여 명의 자원봉사 인력들도 활동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박광서)도 불교아카데미, 교단자정센터, 참여불교네트워크, 격월간 참여불교 등 출판사업, 대안운동 등의 사업에서 2~30 여명의 불교학자나 전문가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01년 10월에 개원한 불교아카데미의 경우 유평화 성균관대 교수가 컨설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영관리자과정, 21세기 사찰모형탐구 등 6차례의 승·재가 교육을 통해 100여명의 교육생

재가교육

인원은 어림잡아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실시여부, 교재활용 등 기본적인 통계만 얻었을 뿐 피교육인원,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신도전문·재교육

기본교육을 마친 불자들의 심화과정인 전문교육은 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나 교육을 실시할 강사 확보의 어려움, 스님들의 인식 부족, 행정적 지원 부족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사요건은 강화된 반면, 낮은 보수 때문에 강사진 확보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승려의 본분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신도단체 임원과 재가종무원에게 실시해 온 재교육은, 교구·지역신도회와 일정이 맞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일정조정에 실패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올해부터 시행주체를 교구본사로 옮겼다. 그러

나 교육 주제만 바뀌었을 뿐 프로그램 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동국대 불교학부

불교 인력 양성 창구인 동국대 불교학부 배출 인력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드러난다. 2001~2002년 불교학부로 전과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는 반면에 다른 학과로 빠져나가는 전과생은 10%에 달했다. 이처럼 인력이 다른 분야로 유출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낮은 취업률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불교학부 졸업생 특별채용제나 학제 개편, 장학금 지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청소년·청년

어린이·청소년·청년 교육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교육 프로그램과 단계별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청년층에 대한 스님과 신도회의 관심과 어린이회 등에서부터 신도회까지 실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어린이회, 중·고등학생회, 청년회 등의 운영 유무를 따라 주지 인사교과에 반영하는 등 종단 차원의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

한명우·박봉영·남동우 기자